

NEWS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광주시, 특광역시 첫 ‘노후상수도 개선’ 국비 확보

▶1면 ‘면허시험장’서 계속

현재 면허시험장 건립 사업비는 370억원에서 452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광주시와 교통관리공단은 지난해 이미 투자된 금액 220억원을 제외한 건립비 150억원을 국회에 추가로 요청했으나, 최종 42억원만 반영됐고 나머지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64원 등 내년도 예산안에 확정되면서 건립 공사는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다.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시험장 규모 축소도 불가피하다.

현재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은 행정동(본관·3층)과 시험동, 정비동 등 3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나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부 건물은 들어설 수 없다.

이별 경우 면허시험도 1종·2종·대형면허만 가능하고 제2종 소형(원동기)이나 대형견인 등 특수면허 시험은 불가능할 수 있다.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면 광주 시민들은 또 다시 나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에 따른 지장물 수용 과정이 길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됐지만, 지난해까지 220억원을 투입해 설계와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했고, 올해 추가 국비도 확보해 건립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상비와 건축비 등이 늘면서 사업비가 급등해 준공은 2026년 12월여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1면 ‘서방천 일대’서 계속

그러면서 복개 해소와 우회 배수, 우수 저류시설 확충, 하천 생태 복원, 도시 침투 기반시설 정비 등을 제안하며, 서방천과 용봉천 복개 구간의 생태하천 복원을 주장했다.

광주천 저류하천인 서방천과 용봉천은 모두 복개된 뒤 폐천됐다. 그러나 좁은 관로에 따른 병목현상과 자연스러운 물결이 사라진 탓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산안교 일대가 범람하기도 했다.

현재 광주는 하천 35개 중 15개가 복개됐으며, 대부분 광주천 저류하천으로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누수 심각·싱크홀 우려 등에 정부에 지원 건의·설득
상수도관 절반 20년 이상 노후...지방재정 감당 못해

광주시가 국비 등 사업비 719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특히 광주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216억원을 확보해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시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국비 216억원, 시비 503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상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와 이로 인한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도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 제약으로 광역단위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상수도 정비사업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2~2023년 최악의 물 위기를 겪으며 누수가 심각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 중앙정부에 개선사업에 대한 정책 건의와 설득에 나섰다.

강기정 시장은 2023년 당시 “환경부 등에 광주의 상수도관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으로 특·광역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같은 광주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와 정부와 소통 노력에 이번 국비 확

보라는 결실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전체 노후 상수도관(배수관) 216km 중 우선 104km 구간이다. 광주시는 2026년 사업비 171억원(국비 51억원·시비 120억원)을 투입, 28km구간을 시작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고, 누수에 따른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도물 수질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일웅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광주시는 물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번 국비 확보는 그 결실이며, 앞으로도 유수할 향상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김영만 전남대 교수, 지방시대위 위원 위촉

신임 위원 14명 위촉...“5극3특 대표성·전문성 고려”

김영만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명예교수(사진)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김영만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4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부위원장은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영만 교수는 광주 광산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Ames Lab, US DOE 연구원, 한국가스공사(KOGAS) 연구개발원 등을 거쳐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8월 말 정년퇴임했다.

전남대 재직 시 국제협력본부장(대외협력처장), 공과대학 학장, 산업대학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산업융합원 원장으로 재직 중 이다. KEPCO 전력연구원 및 지역 중소기업과의 산학 R&D 협력에도 힘써 온 그는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서 ‘골고루 잘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대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오는 11일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9일 시청 비즈니스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 회원들과 환담을 나누는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국가폭력 아픔 인권·평화의 가치로 승화”

강기정 시장, 제주4·3 유가족 환담... 평화·인권 연대 강화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운데)를 만나 9일 역사적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비즈니스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환담했다.

이번 환담은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을 겪은 광주와 제주가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양 도시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광주와 제주는 국가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아픔을 인권과 평화의 가치로 승화시켜 왔다”며

“이번 만남이 두 지역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의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 가족들은 오랜 시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큰 아픔을 삭혀왔다”며 “평화·인권 연대를 통해 함께 힘 있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대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장은 “광주와 제주가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또 제주4·3기록물이 지난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에 대한 축하 인사도 건넸다.

김효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 부녀회장은 “4·3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를 반겨주셨듯이 오월어머니들이 제주에 오시면 누구보다 반갑게 맞이하겠다. 5월의 빛고을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2024년, 2025년 2년 연속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한편 유족회 간담회 등을 통해 4·3과의 평화연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산하 21개 지회가 광주시를 방문하는 등 연대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제주4·3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지속하며 세계인권도시로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목포 앞바다, 쓰레기 유입 대책 마련 시급”

최선국 도의원, 과학적 관리체계·통합 거버넌스 구축 촉구

목포 앞바다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대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목포 앞바다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또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둑 수문이 개방되면서 약 1600t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목포항으로 밀려와 항만이 마비되고 어민과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의 65.3%가 육상에서 발생하며, 상당수는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그는 지금까지 국비 지원과 지자체 협약을 통한 사후 수거에 의존해 왔으며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단순 수거가 아니라 원인 차단 기술 개발과 예방 체계 구축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IoT 기반 모니터링, 스마트 차단막, 현장 처리 기술 등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도입과 함께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차오름 (유) 차오름피앤디
CHAORUM Planning & Development Co., Ltd.

A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정로 3, 2층
A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 44, 3층 301호
Tel. 062-710-5758 Fax. 062-710-5759
E-mail. corpd@naver.com

- **농어촌지역개발** 타당성 분석, 예비계획,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 **측량업** 공공측량,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드론측량, GIS
- **지하수관련**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이용개발시공
- **시설물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 **종합디자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리플렛·포장패키지·스토리북·사진첩·조감도 제작
- **엔지니어링사업** 토목설계(도로 및 공항·상하수도·토질·구조), 도시계획(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감리